

만 5세 공통과정으로 보육·교육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길

조복희 소장

지난 5월 2일, 정부는 취학 직전 1년의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자 「만 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여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만 5세 공통과정」 도입은 우리나라 만 5세 아동에게 맞는 공통과정을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5세 어린이들에게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한 과정을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이다. 이것은 1997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만 5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한 지 15여년 만에 비로소 국가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다.

현재 만 5세아는 약 44만 여명으로 이 중 약 90%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나 약 10%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교육과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영어학원 이용 선호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도 있고, 경제적 부담으로 다니지 않는 아동도 있는데, 이러한 아동도 이제 만 5세 공통과정 시행으로 최소한 출발선상에서의 평등권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정부가 공통과정을 만들고 보육·교육비를 지원한다면 이는 무상급식에 이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발표된 정책은 오히려 보육·교육 현장에 혼란만 부추길 수 있으며, 공통과정 개발, 교사 교육, 교사 수급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첫단추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공통과정 운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의 교육·보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으며, 만 5세에게 투자되던 국고 지방비가 보육시설 개선이나 교사 쳐우개선비 등으로 지원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육시설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의 교육·보육비 지원으로 저출산 완화라는 간접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만 5세 공통과정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자녀양육비로 부담을 느끼는 젊은 부모들은 국가에서 보육비·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본 연구소는 현재 「만 5세 공통과정」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만 5세 공통과정'이라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명칭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한 달반 동안 4천 여명이 참여하여 5,600여 건의 명칭 응모작이 접수되었다. 응모된 명칭 중 우수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보육·유아교육 학계 및 현장 전문가, 학부모, 네이밍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하여 2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다. 그 결과 만 5세 공통과정의 도입 취지를 잘 표현하고 기존의 명칭들과 차별화되며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명칭으로 '5세 누리과정'이 최종 선정되었다. '5세 누리 과정'의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교육을 통해 만 5세 어린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고, 생활 속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만 5세 공통과정' 개발을 위탁받아 유아교육·보육 분야의 학계, 현장 전문가들로 TF 팀을 구성하여 공통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표준보육과정, 유치원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유사점이 많아 두 과정을 통합하여 새로운 공통과정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본다. 만 5세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공통과정은 정부가 발표한 바와 같이,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형성하고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시민의식 등을 키워주는 생애 초기의 기본 소양을 기르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다. 현재 공통과정 개발은 유아 교육·보육 분야의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있다. 만 5세 공통과정 개발 TF에서 마련된 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동시에 고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통과정 해설서와 교사 지도서 개발, 담당교사 연수 등 산적한 일들이 많지만, 정부가 초기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만 5세 공통과정의 시행은 무사히 진행되리라 본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밀한 준비와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 인생의 출발선에서 모든 유아가 똑같이 시작하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